

| 사회적 대화 논단 |

# 업종별 사회적 대화, 왜 필요한가?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 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자연수과정 주임교수
- 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도 중앙차원의 대화는 물론 업종별 협의회 운영에 공감대를 가졌다. 그렇다면 왜 업종별 대화가 필수인가?

## 일자리 유지·창출 위해 업종단위 대화 필요

노사관계에서 대화란 노사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대립과 갈등을 완화해보자는 차원과 더불어, 사용자 혹은 정부 등 최종결정권을 지닌 주체가 조직 혹은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참여시킨다는 차원이 동시에 작용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했을 때 합의 혹은 협의 결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도와 실천 정도가 가장 높을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대화와 협의의 단위는 중앙 차원 혹은 거시 수준(macro level)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범위 수준(meso level)과 미시 수준(micro level)도 있다.

미시 수준이 사실상 기업 단위 경영참가이거나 노사협의회 기능과 중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논한다면 업종별 혹은 지역별 노사정협의회와 같은 중범위 수준에 주목하게 된다.

지역별과 업종별 노사정협의회는 모두 나름의 존재 의의를 갖는데, 지역이 생산뿐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의 공간으로서, 노동과 복지, 일자리 변동·이동과 지역 정치의 동학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면, 업종은 글로벌 경쟁, 산업정책, 그리고 기업 간 경쟁과 협조의 동학이 치열하게 작동하는 공간이다.

중범위 수준의 사회적 대화 중 여기서는 업종별 대화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최근 한국GM 사태나 그 이전의 조선업종 구조조정, 그리고 보건의료업종의 일자리 유지 혹은 창출 논의가 업종단위의 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변동이 미치는 영향도 업종별로 차별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업종을 단위로 한 대응 태세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 업종별로 기술과 특성이 다르다

사실 중앙 수준에서는 일반적인 법제도의 제·개정이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에 대해 논할 수도 있고, 보편적인 복지 제도에 대해 토론할 수도 있다. 그러한 토론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업이나 개인 사례 등도 다루어지겠지만, 아무래도 중앙 수준의 대화는 구체성과 현장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면 업종단위 사회적 대화는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개별 기업이나 노조, 혹은 개인들의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는다. 요컨대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성을 확보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업정책 혹은 노와 사의 실천에 의하여 일자리를 만들거나 갈등을 해

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도출하는 단위가 바로 업종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업종을 단위로 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좀 더 논의해보기로 하자.

첫째, 기술의 종류와 영향의 정도는 당연히 업종별로 달라진다. 철강이나 화학업종과 같은 일관생산공정을 가진 공장의 인력관리 특성은 조선산업과 같이 집적 생산(batch production)을 하는 공장이나 자동차나 가전과 같이 흐름생산을 하는 공장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사업 흐름도가 다른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업종과 공정의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의 활용 양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정규직 관련법의 규정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업종별 논의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업종별로 합의된 비정규직 활용 가이드라인을 각 기업들이 철저히 준수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경쟁조건이 되기 때문에 불법과 편법에 의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려는 유인이 줄어들게 됨은 물론이다.

기술과 서비스체계의 차이는 요구되는 숙련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훈련과 자격제도, 그리고 관련된 임금체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인력 양성과 활용에 있어서 업종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인적자본의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업종별로 경쟁과 시장구조가 다르다

둘째, 업종별로 국내외 경쟁의 정도와 시장구조가 다른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부품소재 수출이 늘어나는 업종에서는 조기에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훈련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며, 반대로 중국 업체들의 과잉투자로 생산능력이 공급 초과로 돌아선 산업에서는 예상되는 가격 인하 혹은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를 발동할 수도 있다.

우리는 사후적이고 목전에 닥친 구조조정은 항상 극심한 노사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기업 경영과 노동에 미치는 국내외 경쟁의 영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시적인 대응태세를 논의해 나간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설익은 구조조정에

따른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원·하청 관계의 발달 정도도 업종별로 매우 상이하다. 예를 들어 섬유·의류산업에서는 대형 소재업체가 가치사슬을 지배하는 반면에 자동차나 전자산업의 경우는 조립업체가 하청기업들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며, 이것이 노동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원·하청구조의 차이로 인한 노동조건의 차이를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종단위가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다.

한편,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미치는 영향도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책도 당연히 업종별로 달리 수립될 수 있다. 업종별 협의회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정부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정책전달체계가 될 수도 있다.

## 업종별로 법제도와 정책효과가 다르다

셋째,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의 종류별로 법제도와 지원 혹은 규제 정책이 달리 작동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보건의료산업의 각종 규정은 운수산업의 규정들과 매우 상이한데, 각 규정은 산업별 훈련, 자격, 인력 수요와 활용 양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간호 노동은 의료수가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정원이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와 사가 이를 넘어서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의 실시는 이 분야의 노사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렇듯 각 업종은 지자체 이외에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부 등 해당 부처의 제도 및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노동 및 고용 문제와 관련한 사전적인 협의와 대화는 제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걸러내고 긍정적인 정책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대화는 참여라는 가치를 통한 갈등 완화와 생산적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와 국민들이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통해서 정책의 효과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대화, 협의, 합의에 따르는 에너지와 비용이 무척 커 보이겠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비용보다 이득이 더 크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업종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를 간략히 세 가지만 설명하였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업종별 기술의 차이, 국내외 경쟁의 정도, 법제도와 산업정책의 차이들로 인해서 노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지만, 이제까지 이에 대한 수동적 대응에 머무는 것에 의해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적절한 일자리의 양과 질을 확보하는 데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제 기술 환경이 급변할 뿐 아니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새로운 업종별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데 대응하여 사전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거나 일자리를 나누고, 훈련이나 전직지원을 실시하며, 임금 수준과 체계를 조정하는 등의 사전적, 능동적 대응태세를 갖추나가야 한다.

사용자들은 업종별 협회와 관련 부처와의 기존 협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와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왜냐하면 갈등에 대한 사전적 대응태세 뿐 아니라, 향후 산업발전을 위한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경쟁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역시 원론적 산별교섭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대화와 협의 통로를 확보하여 건설적인 논의를 쌓아나가는 것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줄이는 길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노사정협의회는 참가자의 수가 중앙 단위보다 적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익명성의 뒤로 숨기 어려운 반면, 대면 접촉의 증가로 구속력 있는 사회적 약속을 도출하기 쉽다는 장점을 갖는다는 점을 부기하고자 한다. 또한 업종별 협의회 여러 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를 위한 든실한 기반이 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